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소고

이강언\* · 장명순\*\*

## 목 차

- I. 서론
- II.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III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
- IV. 우리의 대응방향
- V. 결론

## I. 서론

2004년 11월 2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팽팽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이 비교적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했다. 4년전 일반국민투표에서는 졌으나 가까스로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당선됐던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위임(mandate)을 확실하게 받은 셈이다. 미국 국민들은 선거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장,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장

\*\* 전 KIDA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지지 계층으로 확연히 나뉘어졌지만, 선거 이후 그들은 미국인으로서의 통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부시2기 이후의 대외정책은 향후 세계질서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한반도는 미국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만큼, 우리가 부시 행정부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동북아정책과 한반도정책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분석과 전망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바람직한 대미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작업들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국익보다는 각자가 서 있는 입장과 위치에 따른 예단과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철저한 국익의 논리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현실이 지배하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부시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바탕아래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분석하고 추진과정을 도출하였다. 부시2기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우리의 “국가이익”이란 대 전제하에 기본방향을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 II.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1.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망

현 부시행정부 외교 진용의 인적 구성과 정향은 레이건을 뒤이은 아버지 부시행정부의 그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레이건이 재임 말기에 이르러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를 인정하였으며 미·소간의 핵 무기 감축도 진전되었으나 출범 초기 특히 1989년 말 몰타 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구 부시 행정부 외교 진용은 고르바초프의 평화공세를 대단히 경계하였다.

부시행정부의 가장 특징적인 외교정책적 철학은 군사력의 우위권 기반으로 한 국익의 추구이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은 부시의 '현실주의자(realist)'로 불리는 안보담당 보좌관 라이스가 「국익의 증진(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에서 천명한 외교정책의 제1원칙인 것이다. 미무역대표부 대표 졸릭(R Zoellick)도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것을 공화당 외교정책의 제1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레이건과 구 부시행정부의 소련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냉전을 미국의 승리로 만들었다는 공화당의 역사적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의 인권에 대한 강조와 민주주의 확산론에 맞서 공화당 인사들은 레이건의 우파 권위주의 정권 지원정책을 정당화하였는데, 그 논리적 근거를 월포비츠(P.Wolfowitz)의 「아시아 민주주의와 미국의 국익(Asian Democracy and American Interes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체제 개혁이 가능한 우파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은 급격한 사회 변혁이 초래할 수 있는

좌파 정권의 수립을 막고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정책이었다.

## 2.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미국의 대외정책은 도덕성(morality)과 현실정치(realpolitik)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도덕적인 목표로서는 美건국이념에 나타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보호와 확산, 그리고 인권 신장 등이 제시된다. 미국이 북한 인권상황과 탈북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수행은 강력한 군사력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세계체제의 안정 및 평화유지를 위한 '지도자' 역할과 패권국가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균형자'의 역할, 세계질서를 위한 '공공재(公共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항상 군사력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해방 정국, 6·25 참전 등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됨)하고, 자유체제에 기초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이것은 한·미동맹이 견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다른 강대국과 달리 한반도에 사활적(死活的)이고 첨예한 국가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세계 차원에서의 '안보적 가치'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된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안보·군사 동맹관계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6·25 한국전 참전은 전쟁 발발 이전의 불개입 정책에서 전격적인 개입 정책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 이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전략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자유체제를 수호하는 적극적인 억지정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은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왔다.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은 강력한 한·미 동맹체제의 유지와 주한미군 전력을 근간으로 ‘한·미 연합억제전략’을 유지하여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안보적 토대 위에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있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며 인권을 억압하면서 한반도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일정권은 동북아 지역의 근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3. 「9·11 테러」

미국의 대외정책은 9·11 테러 사건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9·11 이후 미국 안보전략의 기본 방향은 테러 국가(테러리스트, 테러단체 포함)에 대한 반테러전쟁을 수행하는 문제와 대량살상무기의 억지 문제, 그리고 테러 국가와 대량살상무기의 연계를 차단하는 과제로 압축되어왔다. 이러한 세계안보전략상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는 200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북한체제에 대한 강한 도덕적 불신과 함께 보다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는 클린턴행정부 시절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북

한변화 유도와 대북 화해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책적 효용성을 상실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리하여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대통령 연두(年頭)교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테러를 지원하는 이른바 “불량 국가(rogue states)”로서,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an axis of evil)」국가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특히 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덕적 불신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한 오늘날의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스트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에 주목하였으며, 미사일 수출을 북한과 테러리스트들의 연결고리로 파악하여, 이를 해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의 기본개념은 이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시행정부는 출범 초기 북한에 대해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재래식무기를 철수할 것과 평화의지를 선언할 것 등을 요구함으로써 미국이 단순히 한반도에서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감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가시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2002년 10월 켈리 미국 특사의 북한 방문 이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북한의 우라늄농축(HEU) 핵개발 프로그램 정보를 이미 입수하고 있던 미국은 켈리 특사 방문을 통해 공식적으

로 이 문제를 북한 당국에 제기하였고, 북한이 핵개발 사실을 전격적으로 ‘고백’·인정함으로써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고 핵문제가 또 다시 한반도 안보상황 및 미·북 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 4. 제2기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전망

2004년 美대선은 테러문제,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세계안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진 선거였다.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대외정책 방향과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 온 반테러 전쟁이 미국과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국제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美대선 결과는 부시행정부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대통령의 득표율은 51%로서 케리 후보의 48%를 압도적인 차이로 눌렀으며, 이는 또한 2000년 경우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이고, 당초 전망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상보다 분명하고 신속하게 승부가 결정되었고, 美정국은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대선 결과는 부시행정부에 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기 부시행정부와 선거기간 중 누차에 걸쳐 천명된 것처럼, 미국의 대외정책 기본방향은 對테러 전쟁에서의 승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적극적 현실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D체제 구축,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및 미군의 군사변혁(military transformation) 등의 조치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도 상기 대외정책의 대강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시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강한 도덕적 불신과 함께, 확고한 북한 핵무기 보유 불용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시키려는 강한 의도를 드러낼 것이다. 북한의 WMD(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프로그램 가동 문제와 국제 테러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은 미국의 세계안보전략 차원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대안이 검토되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WMD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PSI가 이미 가동되고 있으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한편, 국제적 협력과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일단 기존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틀인 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미국의 일관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 폐기」)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기 부시행정부는 임기 4년 동안 이라크전쟁 수행과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국가로부터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체로, 앞서 고찰한 대외정책·대북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련국들과의 협의과정을 중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한반도는 이라크나 이란과 다르게 복잡한 국제정치적 지정학적 구도를 안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대북정책 기본 방향이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난망(難忘), 중국의 북핵 협조 부진과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북한의 반발과 대남 군사적 위협 등이 제약



요인으로 분석된다. 향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북관계는 미국의 북핵 원칙과 상기 제약요인들이 얽히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복잡한 구도를 그려낼 것이다 아울러, 이란과 이라크의 위기 국면이 진정될 경우에 미국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동북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라크전쟁의 조기 종료 여부와 이란 핵문제 처리 방향 등도 미국의 북핵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외부 변수가 될 전망이다

### Ⅲ.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

제2기 부시행정부의 구체적인 북핵정책 추진과정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 하에 전술적 차원의 강경과 온건 정책방안 사이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국제 테러조직과의 접촉을 시도할 경우, 또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될 경우, 미국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핵개발 지속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벼랑끝 전술(brinkmanship)과 같은 분란(紛亂)을 동북아에서 일으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일단 중동 지역에 치중하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지속 여부를 주시하고자 할 것이다

#### 1. 대북정책과 목표

##### 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두가지 정책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평화적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강압적 방법이다 한국 사람들은

강압적 방법을 전쟁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강압적 방법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력행사를 위협하는 방법일 뿐 그 자체가 전쟁이 아니라고 인식한다<sup>1)</sup>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문제가 평화적으로 끝났다면 그 때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속성상 국가간의 주요 이슈가 평화적인 방법만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역시 정권의 존망을 걸고 핵을 만들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오직 대화만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국제정치 및 권력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의 소치이다.

#### 나. 제2기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목표

이미 강조했듯이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에서 원하는 보다 원대한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기 보다는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바꾸는데’ 있다 미국은 물론 북한이 가다피식의 평화적 해결 방식을 따르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후세인에게 적용한 공격적 방식을 전혀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핵폭탄이 아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다. 5대강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 미국이 신경쓰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갈 지도 모르는 핵폭탄인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적이 김정일 정권을 교체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이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을

---

1) 이 같은 관점은 비단 미국 사람들의 인식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학의 일반론이다 군사력이란 애초에 “쓰기 위해” 갖추는 것이 아니다 비싼 무기를 사는 이유는 그 무기를 “쓸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군사전략이란 이처럼 역설(paradox)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다 Edward N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chapter 1

자문하는 여러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사실이다.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하다카 요시키(日高義)는 미국 대선 이후 출간된 그의 최신 저서에서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아리크 전쟁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시에 부시행정부는 결코 북한에게 핵과 맞바꾸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슬레진저 전 국방장관, 올시 전 CIA 국장, 리처드 펄 등의 언급을 소개하고 있다 하다카 요시키는 부시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임스 올시 전 CIA 국장의 “우리들은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좋다 그 다음은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sup>2)</sup>

## 2. 대북정책 추진과정

부시2기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은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부시2기의 외교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9·11테러 이후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를 전제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 가. 9·11 이후 미국의 북한인식

9 11 이후 미국은 북한을 탈냉전 시대의 작은 골치 덩어리가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9 11 이후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핵무기 혹은 대량 살상무기에 의한 테러리즘이었다 과거에도 많은 학자들이 대량 살상무기가 동원된 테러리즘을 경고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9 11 이후 비로소 진정한 위협으로 간주되었다.<sup>3)</sup> 2004년 가을 미국의 권

---

2) 日高義 앞의 책, p83

위 있는 국제정치학자 앨리슨(Graham Allison)은 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이라는 책을 출간, 미국과 세계에 대해 핵을 사용한 테러 공격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핵을 사용한 테러리즘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이냐의 절박한 문제라고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만약 핵을 사용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핵폭탄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즉 구소련이 붕괴되는 와중에 분실했을지도 모를 핵폭탄, 미국과의 동맹이 되기 이전 파키스탄이 혹은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넸을지도 모를 핵폭탄, 그리고 북한이 돈을 받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도 모를 핵폭탄이라는 것이다.<sup>4)</sup> 이중에서 미국이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북한 핵 뿐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물론 당장 발등의 불인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강력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들은 “알카에다 혹은 다른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팔려나갈 수도 있는 한발의 핵폭탄은 미국에게 있어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며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제거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도다<sup>5)</sup>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바라지만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관계가 대

---

3) 이미 1970년대, 1980년대에도 핵무기에 의한 테러 위협 경고는 적지 않았다 예로서 Louis Rene Beres, *Terrorism and Global Security The Nuclear Threat*(Boulder Westview Press, 1979)를 참조

4) Graham Allison.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New York Times Books, 2004)

5) David Frum and Richard Perle *An End to Evil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New York Random House, 2003) pp 101-104

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9·11 이후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1994년 당시 북한 핵은 미국에게는 “핵 확산”의 문제였다. 북한이 핵을 1~2발 가지고 있는 것은 눈감아 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말이다 그러나 2002년 새로 발견된 북한 핵의 문제는 “테러리즘”의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 즉 미국은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받고 핵무기를 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역시 핵무기를 한발이라도 입수할 수 있다면 무슨 수단을 쓰든지 이를 입수하고자 할 것임이 분명하다. 만약 테러리스트가 입수한 핵폭탄이 미국 본토에 반입된다면 그 경우 미국이 당면할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를 제조하고 이를 테러리스트들에게 꽤히 팔아넘길 수 있는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미국은 ‘인구 15%인 300만 명을 굶어죽이고도 100만 대군을 유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나라’의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체제(정권)와 북한의 지도자를 원천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나. 대북 정책 추진 방안

### 1) 리비아식 북핵 해법 고수

2004년 7월 방한한 라이스는 당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이야기를 나누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리비아식 북핵해법에 대한 선호도를 확연히 드러냈다. 라이스는 방한 시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핵을 인정하고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회피한 채 플루토늄 핵문제만을 다루는 방식은 미국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매파식 관여' 정책

2004년 11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여타 관련국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며,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중동 문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북한을 빠르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전후 재건 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물질 해외 이전과 같은 인내의 '한계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북핵문제를 제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들도 외교적 노력을 충분히 소진해야 강경 정책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온건 접근법을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 3) 인권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

라이스 국무장관은 2005년 1월 18~19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확실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아직도 폭정의 진초지역들(outposts of tyranny)이 있다. 미국은 쿠바, 미얀마, 북한,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의 꺾박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북핵문제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다루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 다. 대북정책 추진과정

### 1) 대북정책 추진 핵심요소

향후 한반도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요소는 6자회담의 성패, 제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적 구성, 이라크·이란을 비롯한

중동 정세, 미·중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주한 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진행상황 및 군사력의 변화, 남북관계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수는 대단히 복잡한 함수관계를 만들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첫째, 주요변수로 4차 6자회담에서의 협상 타결 후의 그 실행에 관한 변수를 들 수 있다 북한 핵 위기의 극적인 반전은 다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익 당사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모호한 합의문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타결 직후 북한이 경수로 우선 건설을 주장하는 등 그러한 징후들이 계속될 것이며, ‘기브앤드테이크’ 신경전이 계속될 경우 제네바 핵 합의 시와 같이 합의 이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며, 이는 새로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향방과 관련해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외교안보팀의 인적 구성이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팀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한 “네오콘”세력의 주도권 장악을 들 수 있다(일부 교체가 있었지만) 제2기 부시행정부는 초강경기조의 대북정책에 대한 ‘내부적 합의’에 도달할 공산이 크다. 제1기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 가운데 ‘협상파’는 존재하지 않고 ‘정권교체’나 ‘북한 위협론의 제거’를 선호해왔던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들 수가 있다.

셋째, 향후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이라크·이란 등 중동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자유선거와 헌법제정을 통해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새로운 정부가 ‘친미’ 성향이 되도록 대규모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시는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에게 추가적인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한국군의 임무

역시 미군과 함께 이라크 저항세력 및 테러집단 제거로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파병을 해준다는 것 자체를 중요시켰지만, 재선 이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고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한반도의 정세는 부시가 이라크·북한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다. 이란은 2004년 초에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추가의정서에 서명해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무리한 요구와 전력생산용 핵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던 유럽연합의 약속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2004년 7월에 발표된 미국 의회의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란이 알카에다와 연계를 갖고 있었다고 발표해, “부시가 재선할 경우 이라크 다음에 이란이 공격 목표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듯 2004년 7월 미국 하원은 이란의 핵무장을 억제·좌절·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모든 수단’을 미국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376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부시가 재선할 경우 이란 내부의 폭동을 유발하는 등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1기 부시행정부 때에는 “이라크냐, 북한이냐”던 논란이 2기 때에는 “이란이냐, 북한이냐”로 바뀔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끝으로 제4차 6자회담의 외면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핵 비확산체제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방향은 북한 핵의 제거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 IV. 우리의 대응방향

### 1. 기본 고려요소

9·11 이후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과 한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크다 역사 이래 최대강국인 미국은 북한을 主敵중 하나로 명시한 반면 한국은 주적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야단이다. 동맹이란 友情관계가 아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것이 동맹이다 한미동맹이 문제가 많은 이유의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적에 대한 인식이 다른데 어떻게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될 것을 기대한단 말인가?

북한의 핵을 절박한 문제로 느끼고 있는 미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할 것이다. 과연 한국은 미국이 절박해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적이었나? 물론 한국 사람들은 북한 핵을 미국과 같은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미국인들의 인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북한 핵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즉 ‘북한 핵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은 궁극적으로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사고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분석하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가 있던 없던, 우리가 북한 핵을 위협한 것으로 보든 보지 않던,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 것이라는 엄연한 국제정치적 현실이다 확실한 사실은 한국의 도움이 없을 경우라도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 달라

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sup>6)</sup>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한의 정권과 북한의 핵에 대한 인식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함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북한을 의미할 것임이 분명하다. 즉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 상황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의 도래를 의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앞으로 한반도에 초래될 상황이 민족의 통일로 연결될지, 영구 분단이 될런지, 북한이 중국의 또 다른 티베트가 될런지는 한국이 하기 나름이다. 확실한 것은 한국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든 말든,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든 말든, 일본의 영향권이 되던 말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상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는 쉽게 나온다. 한반도의 미래를 염려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이 시점 더욱 돈독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소이(所以)가 여기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현존 핵무기 보유에 동의하면서 그 이상의 핵무기 제조금지를 전제로 북한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 보유만으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등에 대해 핵 위협을 가하면서 그들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역시 미 본토에 대한 핵무기 테러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제한된 의미의 핵 무기 확산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북에 의한 단독 비밀협상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전략 수립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 2. 대응방향 설정시 주요변수

---

6) Anna Fifield, "US ignores pleas for flexibilities on N Korea over nuclear Crisis" Financial Times 2004.12.3일자 <http://news.ft.com>.

### 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점진적 접근

남북관계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 즉 인간의 복지와 안위에 대한 위협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경험·인도적 지원으로부터 재래식·WMD 위협에 이르기까지 관련 이슈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내 식량배급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비교적 용이한 이슈로부터 점차 탈북자 보호, 인권개선 등의 민감한 문제로 옮겨가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점차 북한 내 인권문제도 개선될 것이므로, 관련 당사국 모두 우선 북핵 포기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4차 6자회담 진행 및 그 결과 실행에 있어 ‘시간끌기’에 주력할 경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남북채널을 통해 북측에 철저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나. 대북 ‘과감한 접근’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준비

북한이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제공될 수 있는 대북 식량·에너지·경제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준비작업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 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지원내용 및 규모가 정확히 산출되어야 하며,
- ② 부담 공유를 위한 대주변국 외교노력이 강화·지속되어야 하고
- ③ 내부적 재원조달 노력을 위한 장기적 재정계획 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여론형성 노력도 필수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 다. 한미협력을 통한 한국의 방위역할 증대

한국정부가 한국 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책임 증대를 강조했듯이, 한국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DMZ 방어로부터 현대전 수행능력 함양에 이르기까지 방위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높은 정보기술산업 수준을 바탕으로 양국은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and Intelligence) 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네트워크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양국군은 긴밀한 협력과 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한미간 ‘신뢰’와 ‘비전’을 바탕으로 방위산업협력과 기술이전을 개선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 한미 전략대화 채널의 체계화

2006년 한미관계의 최대 화두는 “한미동맹의 미래”가 될 것이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간의 차관급 전략대화, 기존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을 대체하여 구성하기로 한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민간차원(track-II)에서 양측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 전략대화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중층적으로 전개될 양국간의 공식, 비공식 전략대화 채널이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양국간 협의체들이 상승(synergy)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조정역할이 기대된다.

### 3. 대응방향

이른바 ‘북핵 문제’로 표현되는 북미 갈등이 폭발한 지도 2년이 지났고, 4년 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올스톱시켰던 부시행정부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제2기 부시행정부 임기인 2008년까지 한반도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민주화문제 해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보다 강경해 질 것이고, 이에 따라 북미 대결은 제4차 6자회담의 외면적인 타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없는 한 4차 6자회담의 형식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6자회담결과에 대한 실행 면에서의 교착이나 좌초는 그만큼 우리에게 위기의 크기를 더해 줄 수밖에 없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핵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남북한 주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장밋빛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실행에 대한 결과 예측이 난해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현실이며, 정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치밀한 ‘예방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

#### 가. 북한의 변화방향에 대한 합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

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미 양국은 어떠한 '변화'를 북한에 대해 원하는지를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긴 아직 이르다. 단기적인 이득을 노린 '전술적' 변화인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한 '전략적' 변화인지가 불분명하다

북한의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체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의 붕괴'를 염려하는 김정일 위원장으로서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원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향후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Plan A). 물론 북한의 변화가 실패할 경우를 상정한 대비책(Plan B)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더라도 이해 사안별로 양국의 정책목표를 충족시키면 충분한가 등 대북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 나. WMD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우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핵문제가 미·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북·미 간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도 연결된 사안이므로 핵문제를 남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간에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이 북한 핵문제에 관해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사일 문제에 관해선 부시행정부의 MD 추진이 북미관계 및 남

북관계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미사일협상과 MD 추진을 분리하여 MD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WMD 문제, 특히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득을 명확히 함과 더불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MD에 의해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4차 6자회담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한 WMD 문제 해결을 위한 참가국들의 진지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 다.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재래식 군비통제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우선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휴전선 부근의 북한 야포는 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래식 위협의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3월 28일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한 슈워츠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의회 증언처럼 한미 간에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시각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재래식 위협문제에 관한 협상은 한국이 주도하고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자는 한국정부의 ‘역할분담론’을 부시 행정부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며, 오히려 재래식 위협문제가 소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역할분담론’은 마치 북한 핵 문제는 IAEA가, 미사일문제는 미국이, 재래식 위협문제는 한국이 전담하고 이외의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공동접근법(synchronized approach)’을 전제로 미국 및 일본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한국은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미사일문제가 모두 한국의 문제인 것처럼 간주하여 미사일 포기에 대한 보상문제를 우리가 전담하게 되는 실수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느슨한” 역할분담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재래식 군축문제를 한국이 주도한다고 한 이상 북한의 재래식 위협 평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주한미군문제 포함) 등을 한국이 치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보여줌으로써 한국이 재래식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점을 미국 측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감축하는 문제는 누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하는가를 놓고 제4차 6자회담과는 별개로 한미 양국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반도 재래식 군축을 위한 협상은 남·북 및 북·미가 각각 하는 방식과 남·북·미 3자가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단, 어떤 방식을 택하든 북한이 한미관계를 이간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 모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V. 결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2기 부시행정부가 해야 할 주요 과제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다. 1기행정부의 어젠다는 필요에 따른 국제협력력이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로 국내개혁으로부터의 외교정책으로 우선 과제가 달라졌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두곳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금은 “악의 축”의 하나인 북한에 관심을 둘 때이다 따라서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요한 사안의 하나인 것이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 보유선언에 이어서 북한의 핵 실험여부에 대한 논의는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은 북한 핵위기가 재발하여 2년 반이 흐르는 동안 설득을 통한 대화외교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인식은 9·11 테러를 전후하여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희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탕으로 대응방향 도출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놓여있음을 진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부시행정부는 동북아지역에 대한 개입전략을 지속하되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역내 국가간의 대화 및 협력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제2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은 “리비아식 북핵 해법고수”, “매과식 관리정책”,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기반으로 진행된 것이며, 부시2기 대북정책의 구체화 단계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방법과 강압적 방법을 들 수가 있다.

제2기 부시행정부가 원하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 보다는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머무는데 있다. 실행 가능성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제4차 6자회담 결과와 진행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은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엄연한 국제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도움이 없이도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희망이 아닌 객관적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국가이익을 극대화 하는 대응 방향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점진적 접근, 대북 ‘과감한 접근’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의 준비, 한·미 협력을 통한 한국의 방위능력 증대, 한·미전략 대화 채널의 체계화 등을 들 수 있으며, 한·미 간 북한의 변화에 대

한 합의와,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재래식 군비 통제를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의 실행을 위해 일반적인 대북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대북경제지원은 철저한 상호주의 개념 하에 광범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협상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4차 6자회담 결과의 집행 투명성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여야 한다

# A Study on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Chang, Myung-Soon

The point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to support the promotion and stability of Democracy in Iraq and counter terrorism and spread of WMD with his strong propulsive force caused by his reelec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re are his leadership, his team, himself, Kim Jung Il, and a new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fter September 11 as the effective factors of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Pyongyang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also shows the proces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and the future scenario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persistence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such as the method having done in Lybia", "the holding unconditional talks with Pyongyang, and "the continual concerns wit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purpose of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to make North Korea do not support terrorism rather than remove the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The process of outlining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for "national interest" with reasonable analyses not just hopes

For this, South Korea must access systematically human rights of North Korea, prepare projects for a daring approach on North Korea, and strengthen South Korea's defense ability toward North Korea with deep alliance with US and systematize the mutual understanding channel between U.S and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try to get specific methods and practices about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with national wisdom

*Key Words* . USA Foreign Policy of NK